

조국, 가세연 상대 3억 소송...“심각한 인격침해 당했다”

가세연 및 출연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욕적 표현으로 허위사실 유포...피해 심각”

‘조국이 펀드 운영’ · ‘공산당 자금’ 발언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가세연 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세연과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

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유튜브 방송 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추려 이번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이나 아들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여럿 폈다고 한다.

김용호 전 기자의 경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거나 ‘조 전 장관이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발언했으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조 전 장관 측은 보고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닌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5촌 조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함께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승소해 배상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검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을 받으면 그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붐비는 김포공항 국내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남녀 징역 2년...법원 ‘엄단’ 의지

“사회적·경제적 피해 심각”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전주 한제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3018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 몫의 수고비 18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

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3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했다. B씨는 전송받은 번호로 전화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 저축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했다.

조직원은 이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B씨를 속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전화해 B씨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건넬 것을 지시했다.

A씨는 같은 달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982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재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계좌 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정승호 기자

‘황제노역’ 허재호 조세포탈 형사재판 또 공전

뉴질랜드 거주...또 불출석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허 씨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허씨가 지병 악화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뉴질랜드도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 경위에 어찌됐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허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며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점도 있으니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하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사는 “공소시효 도과는 작위적 주장에 불과하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허씨도 조속히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 기자

‘갑질 논란’ 배중호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대법서 파기환송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

률)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7)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

원 등 2명에게도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대표 등이 공모해 국순당 도매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일부 도매점들의 전산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에 의해 업무방해 했다”고 지적했다.

서선욱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